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 · 답변

시정질문과 답변 내용
(일괄질문 · 일괄답변)입니다.



황 경 아 의원

“안전취약계층의 재난 대응을 위한
적극적 추진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환경아 의원

● 환경아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환경아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 장애인 여러분들 그리고 단체 여러분들,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한 정숙한 방청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저는 안전취약계층의 재난대응과 재난안전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추진 방안과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체계 구축방안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먼저, 안전취약계층의 재난대응과 재난안전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추진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장애인을 비롯한 안전취약계층의 재난대응 방안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드렸습니다.

시장께서는 실효성 있는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환경 지원계획 수립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여 장애인 유형 및 취약계층별 현황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한 계획을 수립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올해 대전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지원계획에 따르면 2024년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지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계층별, 유형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기반한 종합계획을 수립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해 제안드린 사항을 반영해 주신 안전취약계층 재난대응을 위한 기반 마련이라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종합계획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인 업무추진체계 마련을 위해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안전취약계층 재난대응 업무추진체계가 충분한 소통과 협조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전광역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에 따르면 안전취약계층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을 말합니다.

안전 환경 지원 조례의 안전취약계층은 안전에 취약하다는 공통적인 특징 외에는 나이, 처한 환경, 소관부서도 다릅니다.

그렇다면 장애인에 대한 재난대응이라고 했을 때 최적화된 전담 소관부서는 과연 어디일까요.

장애인과 관련해서는 장애인복지과, 재난대응과 관련해서는 재난 관련부서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결국 장애인 재난대응을 위해서는 두 부서가 소통을 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협업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안전환경 지원 종합계획 수립을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공문을 보내고 취합하는 역할만을 하는 것인지, 의견조회나 협의체를 구성하여 의견교류를 통해 해당 사안을 마련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시장께서는 우리 시 안전취약계층 재난대응 지원 추진을 위한 부서 간 업무공유 방법과 협업에 관한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획에 대한 업무추진 의지는 예산수립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기존 사업에 의해 수립하고 집행되어 온 예산을 임시방편으로 짜맞추어 편성하는 것이 아닌 종합계획에 의해 예산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2023년 예산수립 현황을 점검하고 2024년 예산편성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전취약계층 재난대응을 위한 안전유관단체 등과의 협업에 관한 부분입니다.

재난 및 안전사고의 상황은 일상생활 중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민간 이용시설이나 안전유관단체와 평소 재난대응과 재난안전 전달체계 구축 및 협력관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 자립생활센터 등 장애 관련기관과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은 재난으로 피해 입은 장애인을 돕기 위해 2010년 전국자립생활협의회와 협약을 맺었고 이를 통해 전국의 450개 자립생활센터와 협력하여 재난 발생에 따른 접근과 기능적 요구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장애조직과 연결하여 장애인의 요구를 능동적으로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단체 지원 조례」에서는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발생 시 구조활동 등을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단체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하여 민관 협업 및 효율적인 안전취약계층 재난대응 지원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를 활용한 민관 협업방안에 대하여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제가 처음 언급한 제268회 시정질문에서 보충질문 시 재난관리 장애전담부서에 대하여 언급을 했던 점을 기억하시고 계시지요?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의 장애전담조직을 예로 들어 말씀드렸습니다.

장애인통합조정부서라는 장애전담조직에서 비상시 장애인들이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도구, 교육, 자원 및 전략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하여 우리 시에도 안전취약계층 재난대응과 재난안전체계를 전담할 조직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안전취약계층의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재난대응과 재난안전체계를 구축하기에는 현재의 조직체계로는 추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각 부서의 소관 업무로 인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하기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행정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체계적인 안전취약계층 재난지원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와 관련하여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체계 구축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중도장애인이란 사고로 인해 장애인이 된 경우를 말합니다.

장애는 80% 이상이 불의의 사고나 질환으로 인한 후천적인 원인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중도장애인이 병원에 입원하는 기간이 매우 깁니다.

재활선진국의 경우 평균 재원일수가 2~7개월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평균 28.7개월이며 절반 이상이 2년 넘게 입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병원에서 재활을 마치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원활하게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갈 준비가 되지 않은 당사자는 다시 입원을 선택하게 되고 입원 기간은 장기화됩니다.

입원 기간이 길어질수록 장애 발생 전의 생활과도 단절이 되고 결국 재활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찾아 입·퇴원을 반복하는 가히 재활난민이 되기도 합니다.

사고로 장애를 갖게 되면 장기간의 입원치료뿐만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 그리고 가족들이 심리적인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손상 전 11%인 무직률이 손상 후 42%로 증가하고 간병으로 인해 가족구성원이 직장을 퇴사하는 경우가 43.8%인 절반에 이릅니다.

이로 인한 가족 소득감소는 63.2%에 이릅니다.

손상 이후 대부분의 가족인 73.5%가 갈등을 경험합니다.

갈등의 원인은 간병으로 인한 에너지 소진 및 스트레스가 44.7%, 경제적 원인 등이 30.8%로 나타났습니다.

체계화된 사회복귀 지원의 부재는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불러오고 장애 당사자의 무기력과 더불어 가족기능 상실로까지 이어집니다.

후천적인 장애인의 사회복귀 지원은 사회경제적 비용과 관련되어 초기 적극 개입 여부가 비용절감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척수장애인의 탈의료화를 위해 의료지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복귀까지 지원하여 척수장애인들이 조기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비용을 절감하고 있으며 각 나라의 현실에 맞게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립재활원, 근로복지공단 산재지정병원과 같은 공공의료기관 및 민간의료기관에서 척수장애인 대상 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지만 장애진단에서부터 사회복귀까지 종합적으로 척수장애인 및 중도장애인을 지원하고자 하는 체계는 찾기 어렵다고 당사자 및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렇게 중도장애인에 대한 지원의 절실함을 각종 수치가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 시는 중도장애인에 대한 실태에 관하여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대처하고 있습니까?

대전광역시 중도장애인의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체계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이에 따른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3월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공무원외연수를 통해 호주와 뉴질랜드의 선진복지시스템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호주 및 뉴질랜드에서는 척수손상병동에서 급성기 관리와 재활서비스가 끝나고 전환재활 서비스를 통해 척수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취업지원, 단기거주시설 등 사고로 인해 장애가 생긴 이후 일상생활 및 사회로의 복귀를 위하여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다는 그러한 점에 대해서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직업재활을 위한 취업 및 고용 지원, 일상생활을 연습할 수 있도록 만든 단기거주시설, 지속적인 재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헬스장 등 기능적인 사회복귀 지원뿐 아니라 심리적인 외상에 대처하기 위한 상담 지원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지원을 통한 사회복귀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충남대병원 재활센터에서는 이와 같은 서비스를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일상홈을 이용한 중증척수장애인 맞춤형 사회복귀 지원모델을 개발했으며 중증척수장애인 생활훈련지침서, 일상홈 사용매뉴얼까지 제작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원을 활용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장님!

충남대병원 재활센터에서 실시한 사회복귀 시범사업을 대전시에서 확대·연계하여 시행할 수 있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한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우리 시는 복지수범도시로 그동안 매년 1등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중증장애인에게는 아직도 우리 주변에 넘어야 할 문턱이 너무나 많고 높습니다.

비장애인에게는 그저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상황이 중증장애인에게는 매우 힘들고 매우 어려운 재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장애인의 복지와 안전한 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신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저도 더 적극적으로 우리 시가 갖추어나가고 살펴야 할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와 빠른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존경하는 황경아 의원님께서는 안전취약계층의 재난대응 추진,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체계 구축방안 등과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평소 사회적약자를 위한 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시정발전에 늘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시는 황경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취약계층 재난대응 관련 추진상황 중 부서 간 업무공유 방법 및 협업과 관련해서 또 안전취약계층 재난대응을 위한 예산수립 현황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시는 장애인·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해 분야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오프라인 회의 등 부서 간 지속적 의견교환, 소통, 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지원계획에 따라 부서 간 공유와 실적관리 등을 시민안전실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안전실과 다른 조직 간의 협업을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시민의 안전은 시민안전실이 사실상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안전실이 주도가 돼서 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취약계층 재난대응을 위한 예산현황은 2023년도 기준 81억 7천만 원으로 8개 부서에서 4개 분야 17개 과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수요조사 용역결과에 따라서 안전취약계층 재난대응을 위한 정책 발굴과 예산을 반영해나갈 생각입니다.

특히, 4대 분야 17개 과제 중에는 소방, 가스, 전기시설 등 일상 속 안전생활 지원강화 분야, 안전취약시설 환경개선 후 안전인프라 기반구축, 계층별 맞춤형 안전물품 제공, 안전교육 종합안전 점검 등 관련된 4대 분야 17개 과제에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안전취약계층 재난대응을 위한 안전 유관기관 등과의 민·관 협업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재난 및 안전사고 상황은 일상생활 중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안전유관 단체와 협력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안전문화추진대전협의회와 대전재난안전네트워크, 안전모니터봉사단 등 안전유관단체와 함께 각종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협력활동, 재난대응 합동훈련, 교육 홍보, 재난안전 정보교류, 연계활동 캠페인 등 유기적인 협업으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런 협업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라도 이 분야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잘 보완해서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의 안전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협업체계를 더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안전취약계층 재난대응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는데, 이 전담조직 설치의 용역결과가 나오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충분히 반영하고 정책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시민안전실에 이런 조직을 함께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전담체계를 따로 하는 게 좋은지는 용역결과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가장 효율적인 전담조직 설치와 관련해서 판단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금년 7월부터 5개월간 실시하기 때문에 용역 마치는 대로 의원님과, 많은 관련 단체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전시 중도장애인의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체계 현황과 관련해서 물어주셨는데 2022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 시 중도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80.6%로 5만 8천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선천적 장애를 갖고 태어나신 분들이 10% 내외가 될 것 같고 대부분은 후천적 장애,

질병이나 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후천적 장애를 갖게 되고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 죽기까지 반드시 대부분은 장애를 한번 겪게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안경을 쓴다든지 이런 것도 다 사실상 시력장애가 오기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장애는 한번 반드시 경험해야 될 일이라고 보는데 이런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역할 그런 것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의원님이나 저나 같은 의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중간에 중도장애인, 사시다 중간에 장애가 생겼을 때 특히 절망감이나 어려움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분들이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더 나아가서 육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잘될 수 있도록 교육이나 재활, 직업상담에서 상당히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맞겠다고 보고 주택공급이나 주택지원 관련해서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의원님과 생각이 비슷합니다.

또 우리 시는 자립생활지원센터 및 장애인복지관 등을 중심으로 장애인 의료재활 및 지역사회 재활시설 등과 연계해서 사회복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많이 해도 역시 이 문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료재활기관에 조금 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전·충남권역 의료재활센터 및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인 충남대학교병원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2개소의 의료재활병원과 각 구별로 보건소 내 재활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지역사회 중심 재활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장애인복지관 8개소가 운영되고 있고요, 또 활동 지원은 26개소, 자립생활센터 7개소,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도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육·재활·직업상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게 기관 설립 이런 것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도 잘 몰라서 이용을 못 한다든지 또 어느 기관에서 받아야 되는지

잘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이런 시스템 가지고는 안 된다고 봐서 이 문제도 앞으로 보다 실질적으로 중도장애인분들이 재활하고 사회복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요, 저도 생각이 똑같습니다.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는 단순한 의료기관에서의 퇴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를 겪게 된 이후에 갖는 신체적인 어려움, 심리적인 어려움 또 사회적 기능과 결합되는 상황 이런 것들의 재조직화가 필요하고 가정생활이나 사회활동, 직업활동에 제대로 복귀해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중도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포함한 현재 추진 중인 지원 프로그램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관계자분들과 조금 더 많은 의견교환을 통해서 내실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중도장애인의 재활치료 후에 단절 없이 지역사회 재활 치료에 연계될 수 있도록,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힘을 적극적으로 쏟겠습니다.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시설 도입 제안에 대한 견해를 물어보셨는데요, 중도장애인을 위한 사회복귀 지원시설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도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단지 충남대학병원 재활센터에서 실시한 사회복귀시범사업과 서울시 및 국립 재활원 등에서 시범운영한 사례를 살펴보면 의료기관 내에 건강력을 포함한 다양한 복귀 프로그램 지원은 재활과정의 연속성과 통합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만 의료기관, 특히 충남대병원이든 어떤 의료기관의 수익구조에 따른 운영에 한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병원들이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요, 의료영역 외에 지원시스템과 연계하는

문제에 제약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과연 의료기관의 수익구조 운영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 문제는 아무래도 중앙정부의 지원이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문제는 우리가 중앙정부의 수익구조에 따른 재활센터 운영 이런 것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에 따라 대전시도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과 정책을 반영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에 이 문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중앙정부가 더 정책과 예산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타 지역 사례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사회복귀 지원제도를 보완해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재활시설 등을 연계해서 강화하는 방안, 그래서 중도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사회복귀가 제대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